

광주 출근길 교통 대란·지각 사태

교통통제 시스템 2시간 장애 57개 교차로 신호 오작동

4월의 첫 월요일 출근시간, 광주시 교통통제 시스템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시가지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마비돼 심각한 교통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4년 광주교통정보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난해 9월 대규모 한진 정전 이후 두번째로, 지각사태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교통정보센터' 신호제어 서버 5대 중 2호기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50분까지 1시간 50여분 동안 광주 57개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오작동됐다.

광산구 광송간 도로 공방방면의 경우 평상시에 없는 정체 현상이 수십 분 동안 이어지면서 차량들이 1km 가량 늘어섰고, 하남6번로의 경우도 정상 신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행신호 때 평상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량만이 통과했다.

이 같은 원인은 '출근→주간→퇴근→심야시간(평일 기준)' 등 시간대별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주기와 체계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교통정보시스템 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심야시간대 신호체계가 변동없이 출근시간

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평상시의 경우 심야시간(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대 차량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의 경우 절멸 신호가 작동되거나 신호 변환 주기가 주간에 비해 짧아지게 된다. 이후 오전 7시부터 9시 까지 2시간 동안은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다시 정상신호로 전환되고 신호 변환주기가 주간과 심야시간대에 비해 30% 가량 늘어나야 하지만 예정

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면서 진입을 빼는 바람에 지각사태와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도 잇따랐다.

회사원 김모(29)씨는 "첨단지구에서 매월동까지 출근하는데, 신호체계가 영향으로 작동해 평상시보다 2배 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평소 진행신호 때 20여대가 지나갈 수 있었

는데 이날은 5대만 겨우 통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유지보수반과 AS반을 투입해 오전 9시께 정상 복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교차로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와 접경을 거쳐, 수리가 불가능하면 시스템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기자 kki@kwangju.co.kr

/최승현기자 srchoi@kwangju.co.kr



황사 예방 이렇게

2일 광주시 북구청 환경과와 보건소 직원들이 봄철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건강보험료 사기범 급증

건보 광주본부, 작년 구상금 청구 소송 등 500여건

국민건강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 이득금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노리는 사기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요양급여비 과다 청구 등 위법행위와 보험사기의 증가는 소송은 물론 징수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선의의가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일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이득 관련 소송은 총 500여건으로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소송도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의 부당 이득금과 구상금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 6만 2050건 ▲2009년 6만 2402건에서 ▲2010년 7만 9727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1년 7만 6079건을 나타냈다. 청구 금액도 ▲2008년 137억원 ▲

2009년 140억원 ▲2010년 157억원 ▲2011년 163억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사항 외에 가입자들의 민·형사상 위법 행위가 증가했고 특히 계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청구 건수와 소송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입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보험사기 등의 유혹에 빠져 환수금 청구가 늘고 있다는 것

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일부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부당 이득금 환수와 미정수금이 늘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위험료율이 조정돼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일부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부당 이득금 환수와 미정수금이 늘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위험료율이 조정돼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지급금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보공단 등은 현재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대략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사소한 위법이라도 절제하게 과악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단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